

# 비리 단체장 배제·현역의원 기득권 내려놓기가 출발점

### 민주 호남 지방선거 혁신공천 어떻게 청년·여성 가점 높이는 방식으로 권리당원 여론조사 비중 낮춰야 공관위 현역의원 입김 작용 문제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빚지고 시작한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되는 구조여서 권리당원 확보가 승패를 가른다. 돈을 들여 후보가 죽기 살기로 권리당원을 모집하거나 조직력이 강한 지역위원장에게 소속되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전남 A지역 시장 후보자)

“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말 공천 혁신을 이룰 수 있을까. 비리 단체장 공천 배제가 기준점이 될 것이다. 그동안 중앙당 한 번 다녀오면 면죄부 줬던 게 사실 아니냐.” (전남 B지역 군수 후보자)

“청년·여성 선거구 지정은 민주적이지 않다. 선거구 지정만으로 비여성·청년은 배제되는 구조를 누가 납득하겠나. 청년·여성 선거구를 지정할 게 아니라 가점을 높이는 방식이어야 한다.” (최영태 전 전남대 교수)

20대 대통령선거 패배 이후 공천 혁신을 외친 더불어민주당이 텃밭 호남에서도 공천 혁신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이는 지역 정치에 대한 이해가 깊은 전문가 뿐 아니라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간판을 달고 나서려는 복수의 예비후보자에게서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목소리다.

일부 후보자는 권리당원 확보·관리를 위한 금품 살포, 지역위원장 등 실제 정치인에 대한 줄서기, 비리 단체장 생환 가능성을 지목하며 민주당 공천이 혁신은커녕 구태 정치, 혼탁 공천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시도당 지도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특

히 금품 제공·실세 정치인에 줄서기 등 구태 정치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권리당원 확보에 의해 경선 승패가 갈리는 구조를 지목하고 있다.

민주당 공천은 단체장 경선의 경우 권리당원과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당원은 권리당원 50% 이하, 일반 유권자 50% 이상으로 규정), 지방의원의 경우 100% 권리당원 여론조사 결과 반영 방식을 택하면서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상당수 후보자와 전문가는 “줄서기 정치, 금품 살포와 제공 등 사라져야 할 구태 정치의 원흉은 권리당원 확보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적어도 광주와 전남, 나아가 전북까지 호남권만큼은 권리당원 여론조사 결과 반영 비중을 낮추는 방식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금품 제공 등 기부행위와 관련해 전남선관위가 조사해 고발·경고 조치한 사례만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15건에 이르는데, 지역 정치권에 선 권리당원 확보 및 관리 과정에서 기부행위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심에 걸맞은 공천이냐의 여부는 ‘비리 단체장 공천 배제’가 이뤄지느냐에 달렸다는 지적도 있다.

뇌물 수수 등 비리 의혹을 사고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현역 단체장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배제하는 게 당심과 민심의 눈높이에 맞는다는 목소리다.

전남 22개 시군의 경우 3선 제한 또는 불출마 선언을 한 시장·군수 4명을 제외하고, 민주당 시장·군수 16명 가운데 5명이 개인 비리 등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는 재임 기간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민주당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으로 참여했던 이근철 전남관광재단 대표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도덕성과 정책적 자질 등 능력을 최우선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비리 정치인을 걸러내고 후보자

의 공약(현역은 공약 이행률 등) 등을 꼼꼼히 봐서 능력과 자질을 살피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이 예고한 여성·청년 선거구 지정을 두고도 “선거구로 지정하는 순간 비여성·청년을 배제하는 불공정한 처사로 민심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며 “청년과 정치 신인, 여성 정치인의 정치 참여를 늘리려면 가산점을 상향 조정하는 게 순리”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등 불공정 여론도 확산하고 있다.

공관위 구성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일부 후보자들은 전남도당 공관위 명단을 입수한 뒤 “전체 19명의 위원 중 현역 국회의원 5명과 나머지 5명의 국회의원의 대리인 5명이 포함돼 있다. 위원 과반이 현역 의원 또는 그들의 대리인인 것”이라며 “특정 후보에게 편향되지 않고 투명하게 공천이 이뤄질지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가 대선 이후 곧바로 치러지는 점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후보자 검증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느냐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앞선 지방선거에서는 입후보 예정자를 가운데 범죄경력에 있는 인사들에게는 판결문을 제출하도록 해 범죄 사실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 검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됐지만, 이번에는 경선 일정에 쫓겨 이같은 방식으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한편 전남에서는 4선과 5선 단체장에 도전하는 이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3선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경감다리 4선’, ‘타지역 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출마 예정자 가운데 단체장을 3회 이상 지낸 후보는 김종식 목포시장과 유두석 장성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이석형 전 함평군수 등이다. 합법적인 정치 행위이지만 일각에서는 “정치 도의상 지나친 욕심 아니냐”는 반론도 나온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다가오는 지방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28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단에 선거 홍보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 광주시교육감 선거 6파전...지병문 전 전남대 총장 불출마

### 각종 여론조사 선두권 후보 단일화 교착에 출마 포기

광주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검토했던 지병문 전 전남대 총장이 28일 불출마 의사를 밝힘에 따라 시 교육감 선거는 당분간 6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지 전 총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형성했지만, 자신이 원한 ‘단일화 밀그룹’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아 출마 포기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관측된다.

지 전 총장은 ‘시민사회단체를 주축으로 한 단일화 논의 기구 구성-전교조 후보를 포함한 일부 후보 단일화 논의 참여-단일후보 선출 절차’를 예의 주시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의 단일화 논의 기구 구성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선거 구도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형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출마를 접은 것으로 보인다.

지 전 총장은 “광주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봉사 하라는 주변의 권유가 있어서 교육감 선거 출마를 고민했으나 지금 어떤 일을 도모하게나 시작하기보다는 멈추고 싶 때라고 판단해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 전 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일부 후보 간 단일화 여부와 파괴력이 미지수가 됐다.

지 전 총장과 단일화 후보 대상으로 거론됐던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측은 “시민사회단체가 단일화를 제안한다면 검토하고 응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지 전 총장 불출마에 따른 단일화 파괴력 등에 대해서는 지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3선인 장휘국 교육감이 출마할 수 없어 무공산이 된 시 교육감 선거는 이처럼 단일화 논의가 수면위로 올라오지 않은 가운데 당분간 6명의 후보가 경쟁하게 됐다.

현재 출마를 선언한 후보(가나다 순)는 강동완(67) 전 조선대 총장, 김선호(74) 전 광주효광중교

장, 박혜자(66) 전 국회의원, 이정선(63) 전 6대 광주교대 총장, 이정재(75) 전 2대 광주교대 총장, 정성홍(60)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등 모두 6명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이정선 전 광주교대 총장, 박혜자 전 국회의원 등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박 전 의원은 지 전 총장이 불출마 의사를 밝히자 입장문을 내고 “지 전 총장의 고뇌에 찬 결단을 존중한다”며 “지 전 총장의 비전과 역량이 광주교육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교육철학과 진보적인 정책을 계승·발전시켜 광주교육을 지켜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교육계 관계자는 “일명 ‘시민후보’로 대변되는 단일화가 시 교육감 선거에서 최대 변수였는데 단일화 논의에 기대를 걸었던 지 전 총장이 출마를 포기해 변수가 어느 정도 사라진 것 같다”며 “하지만 선거는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예측 못할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이용섭 광주시장, 오늘 재선 출마 선언

이용섭 광주시장이 출마 선언과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선 도전에 나선다.

이 시장은 28일 출입기자단과 차담회에서 “29일 오전 10시 30분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라며 “이후 이틀간 내부 정리, 결재 등에 집중하고 오는 31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4월 1일부터 선거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민주·인권 도시인 만큼 옛 전남도청 5·18 광장,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인공지능 대

표 도시를 상징하는 곳 등을 출마 선언 장소로 검토했으나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광주형 일자리’가 태동한 GGM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히 “GGM은 노사 상생, 원하청 동반 성장, 한국 경제 고질적 문제인 고용 저효율 구조 개선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이자 대안이고 인공지능, 친환경차 부품 클러스터를 포함한 광주형 일자리 시즌 2까지 연속성을 염원할 수 있는 곳”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나주 열병합발전소 관련 한국지역난방공사 입장문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지역난방공사입니다. 먼저, 그간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하여 일부 주민과의 갈등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갈등의 해소를 위해 지난 4년여간 설명회 및 간담회를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대표, 국회, 정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갈등요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환경영향조사, 열공급에 대한 합의 등 상생의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발전소에 대한 적법성과 공익상의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한 바 있으며, 특히 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막대한 적자 및 추가 하락 등 상장회사로서 감내하기 힘든 수준의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발전소 운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여건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앞으로도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해 공기업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 공사는 나주 열병합발전소를 설치 목적에 맞게 가장 완벽한 자원순환형 에너지 시설로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요청이 있을 경우 투명한 발전소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에 동참하고, 또한 주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등 국회·정부·지자체·관계기관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는 지역갈등 해소는 물론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주 주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3. 29.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황창화